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여성의당

정책 순위

- 01 — [안전]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02 — [건설] 개별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 03 — [복지] 돌봄의 평등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04 — [안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겠습니다.
- 05 — [노동] OECD 1위 불명예, 성별임금격차를 없애겠습니다.
- 06 — [보건복지] 여성 신체의 건강과 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07 — [여성]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기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08 — [경제] 여성에게 경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09 — [문화] 여성차별, 여성혐오적 미디어 문화를 근절하고 산업 내 여성청소년 착취적 노동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 10 — [정치]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안전] 여성이 완전하게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 복제, 가공, 유포가 용이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에 따라, 동의받지 않은 촬영물 등의 유포뿐 아니라 합성 등으로 조작된 디지털 파일의 유통으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들은 일상공간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음(2019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폭력 지원센터 전체 피해 건수: 4만 9,156건).
- 피해사실을 신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디지털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피해 여성들의 고

통이 가중되고 있음.

- 2019년 12월 서울시 거주 여성 3,678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명 중 1명(43%)이 직·간접적 피해를 경험했으나, 피해 후 대처한 경우는 7.4%에 그침.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43.1%)가 가장 컸음.

-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딥페이크, AI를 이용한 섹스 로봇 등 새로운 문제들을 지속해서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 목표

-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
- 피해 당사자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고, 이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
- 디지털 사회에서 인격권 및 성적침해에 대한 여성 시민의 불안감 해소
- 급변하는 디지털 매체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미래사회 문제에 대처

#### ▲ 이행 방법

##### 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성폭력 처벌 특례법의 처벌 범위를 확대해, 유포 협박, 합성 및 가공, 신상유포, 2차 가해를 처벌 대상에 포함. 피해자가 초상 외의 단서로 특정되는 경우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안 정비
-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포, 방조, 소지 행위를 포함하여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양형기준 강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 유통경로가 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리책임을 부과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 경로가 된 사업체들은 적발 즉시 삭제토록 하며 불이행 시 처벌. 관련 영상 및 키워드 필터링 의무화

##### ②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 체계 구축

- 용의자가 특정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필수요건으로 하여 증거인멸과 2차 유포 방지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포함, 24시간 광역적 대응이 가능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팀을 구축하고, 여성 수사관을 다수 배치하는 것을 의무화
-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 시행

-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합정수사 허용
- 디지털 성범죄 신고접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메신저 형태의 핫라인 구축
-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AI 기술 활용하여 수사효율 극대화
- ③ 피해 여성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적 대응 체계 마련
  -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전담팀에 인력 다수 배치 의무화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비적용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제 3자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 예방
  - 정신적 피해와 명예회복, 범죄 대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 범죄 및 피해 관련 선정적 보도 방지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
- ④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
  -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하고, 현장 활동가들을 이에 포함시켜 구체적 해결방안 도출
  - 디지털 기반 성범죄수사, 피해자 보호·지원 및 불법 촬영물 삭제를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에 예산지원
  - 키워드 기반 AI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신기술 도입과 관련한 윤리, 법, 사회적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주요한 분석틀로 포함시키고 관련 위원회에 여성 전문가 참여 의무화

▲ 이행 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 조달 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증액
- 국가 R&D 지원사업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 포함

## [건설] 개별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성평등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여성 1인 가구 수는 291만 4천 가구로 전체 1인 가구의 4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여성 1인 가구의 증가는 전 연령층에서 관찰되는 추세. 현재 7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가 29.9%로 나타나는 등 고령 여성 1인 가구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한편, 비혼화 경향과 이혼율 증가로 청장년층 여성 1인 가구 역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성별 임금 격차와 여성 빈곤의 문제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어렵게 하는 사회적 조건들이 결합하여, 여성 1인 취약가구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큼. 이에 이들을 위한 주거 안정 및 복지정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시점임.
- 핵가족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정책은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헌법의 이념과도 배치됨.

### ▲ 목표

-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하고 안정된 주거 보장
- 취약여성 1인 가구(노인 여성, 장애 여성 가구 등) 지원을 통한 여성 시민의 존엄한 삶 보장
-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1인 가구를 복지 및 주거정책의 중심에 둬으로써 변화하는 가족의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응

### ▲ 이행 방법

#### ①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안전 및 안정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전용 공동주택 신설, 공급
- 여성 1인 가구주를 위한 금융 관련 지원 및 임대주택 입주우선권 부여
- 도시개발 및 건축설계 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의무화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 여성 1인 가구 주거공동체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여성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회적 연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

#### ② 취약여성 1인 가구 및 고령 여성 1인 가구 지원

- 탈가정 여성 청소년, 젠더폭력 피해 여성, 장애 여성, 저소득 고령 여성 등 취약여성 1인 가구 자립 지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 위험에 또다시 노출되기 쉬운 취약여성 1인 가구의 가구 독립을 위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

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 고령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특화된 생활 안전 서비스 제공. 현행 독거노인 대상 사회서비스에 성별 관점을 도입하고, 특히 빈곤율이 높고 신체적 건강 인식 비율이 낮은 노년 여성의 특성을 고려해 반찬 및 물품 지원, 가사서비스, 맞춤형 운동 처방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년 여성의 존엄한 삶을 보장

- 취약여성 1인 가구 및 고령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

③ 핵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개별 시민 중심으로 주거 및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 시정

- 주택청약제도의 부양가족 가산점, 무주택기간 산정 및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자격요건에서 결혼 여부 항목 등을 삭제함으로써 여성 1인 가구에 불리한 주택정책 개선

- 전세 및 담보대출의 신혼부부 혜택을 폐지, 청년전세자금 대출연령을 성별 관계없이 만 39세로 통일하여 비혼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불이익을 시정 하고,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대응

- 혈연, 혼인, 입양 등 기존의 가족관계에 기반을 둔 '보호자' 개념을 확장하고, 그 밖에 법적 보호자(동반자)를 등록하거나 스스로 지정한 법인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여,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개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

- 여성 비혼 공동체 주거권을 위한 모델 및 관련 정책 개발

- 조세 및 사회보장제도를 1인 가구 중심으로 재설계: 인적공제와 같은 세금공제, 건강보험 등 복지혜택에서의 불평등 시정은 물론, 가족의 부양 및 돌봄 의무를 가정하는 기존의 복지정책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입법 활동 추진

#### ▲ 이행 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 재원 조달 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및 고령 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 시행사업에 성별관점을 도입하여 예산배분방식 변경 및 서비스 개선 등의 형태로 추진이 가능함

- 취약여성 1인 가구 지원사업 역시 기존 주거안정정책과 연계해 진행 가능. 취약계층여성 관련 지원기관들이 주거 및 경제적 자립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시행이 가능함

## [복지] 돌봄의 평등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 돌봄 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 경력단절, 출생률 저하 심화. 가정 내 자녀 양육, 장애인·환자 가족 구성원 돌봄, 노부모 돌봄의 몫이 여성 개인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요구됨.
- 기업 내 여성,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고용차별, 인사차별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임.
- 1인 양육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지원이 요청되며, 이혼 후 여성이 자녀 양육을 전담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대로 된 자녀 돌봄이 어려운 실정임.
- 어린이집, 요양원 등 돌봄 서비스 노동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가혹한 근로조건과 격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돌봄 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 기준과 합리적 노동/임금 기준이 필요함.

### ▲ 목표

- 돌봄의 평등 실현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의 해결
- 돌봄 노동의 몫을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 프로세스 마련
- 1인 양육자, 장애 여성, 장애 가정 양육자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 지원
-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 개선

### ▲ 이행 방법

- ① 남성 육아휴직 강제 의무화 및 불이행 기업 패널티 부여
- ② 1인 양육자를 위한 지원금 및 정부 차원 서비스 확대
  - 1인 양육자의 양육비 청구 소송 시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적극적 구상권 행사
  - 1인 양육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지원금 실질적 확대(월 7~15만 원의 지원금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금 제시)
- ③ 지자체 차원의 돌봄 케어 센터(아이, 노인, 환자 돌봄 분야 특화) 확대 운영·모니터링 및 돌봄 서비스 이용료의 국가 부담
- ④ 돌봄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노동·임금 기준 제정(정규직 전환 확대 등)
- ⑤ 장애 여성의 일·가정 양립 등의 지원: 장애 여성의 특수한 양육환경에 대한 이해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녀 양육의 생애 단계별 돌봄 서비스 제공, 가사노동 서비스 제공

### ▲ 이행 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 재원 조달 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돌봄의 평등 실현은 여성 1인 양육자들의 경력단절을 막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조세 부문의 증가를 이루어낼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충당이 충분히 가능함

## [안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파트너 폭력을 방지하겠습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 심각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가정폭력 사건의 국내 기소율은 평균 7.1%에 불과함. 2016년도 기준 폭력 범죄 기소율 24.7%, 성폭력 범죄 기소율이 33.0%인데 비해 가정폭력 사건은 10% 미만에 머물고 있음. 2017년 기준 1366에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된 것은 18만 326건이지만 사건화되어 사법기관에서 처리된 것은 255건에 불과함.
- 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은 인권 보호보다 가정 유지·보호가 중점으로 가정폭력을 “심각한 폭력 범죄”가 아니라 여전히 “가정 내의 경미한 범죄”로 여기는 법 관점으로 작동하고 있음.
- 법의 적용 대상이 혼인 관계에 한정되어 있어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은폐되기 쉬운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법 개정 방향 마련이 필요함.
- 스토킹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각종 성범죄와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의 예비 행위로 엄중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범칙금 8만원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스토킹 범죄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성별화된 범죄로 피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폭력의 양상이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정부가 2018년 5월에 입법 예고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정의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 목표

-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개개인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마련
- 스토킹을 사회적 중범죄로 인식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

#### ▲ 이행 방법

##### ①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을 파트너 폭력 방지법으로 전환하여 ‘사실혼’ 요건에 미치지 않더라도 관계의 지속성과 상호의존성이 인정되고 관계의 속성에 의해 폭력이 습관적으로 반복, 은폐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계를 포함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 전면 제정.

##### ②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 마련

- ‘가정폭력 피해자 위법성 조각 인정 여부’를 포함한 특례법을 제정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범위 확대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도를 실시
-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폐지하고, 자녀면접교섭사전처분을 금지
- 수사·사법기관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지·출동·수사·재판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 분리조치’를 의무화
- 장애 여성, 이주여성, 청소년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유형에 맞는 폭력 피해자 전문 상담소 확대 및 피해자 자립을 위한 상담 및 지원 확대

##### ③ 가정폭력/파트너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지표 개선

- 가정폭력 사건의 통계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과 규모 파악

##### ④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 스토킹을 중범죄로 분류해 양형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스토킹 처벌과 접근금지에 관한 조항 추가 및 스토킹 범죄 및 피해자 정의 규정 확대
- 국가 책무성 및 예산상 조치 명문화
- 반의사불벌 형사특례조항 적용금지
- 스토킹 신고 시 피해자 입증 책임 면제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 강화

##### ⑤ 스토킹 범죄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 마련

- 수사기관 스토킹 범죄 인식 교육 및 초동대응 강화 훈련 실시



- 영국의 “스토킹 보호명령(Stalking Protection Order)”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스토킹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가 있는 경우 경찰 권한으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 범죄 예방. 증거수집을 위해 피해기간이 연장되고 범인이 심리적으로 더 큰 집착을 가지게 되는 것을 방지.

▲ 이행 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 조달 방안 등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특별히 재원을 소요치 않음

[노동] OECD 1위 불명예, 성별 임금 격차를 없애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OECD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37.1%로 격차가 가장 큰 나라이자 37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30%대의 큰 격차가 나타남.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성별임금격차를 10% 내외로 좁히면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고민하는 상황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우리나라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된 이중구조의 노동시장에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과 같이 임금이 낮은 부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높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음.
-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여성 노동자의 근속년수가 남성 노동자에 비하여 짧게 나타남.
- 2020년 유리천장 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관리직 여성 비율은 14.5%, 이사회 임원 비율은 3.3%로 29개 비교 국가 중 최하위임.
-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 등에서 밝혀진 채용 비리 사건은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에 의하면 2001-2018년 전체 진정 건수 28,748건 중 고용에서의 차별행위 진정 건수는 8,334건(37%)으로 그 중 모집(1,367건)과 채용(1,740) 차별 진정 건수가 가장 높음.

▲ 목표

- 성별 임금 격차 철폐를 위한 법률 제정

- 고용 평등위원회 신설
-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체계, 임금 결정기준에 대한 성차별 철폐
-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원칙을 업종으로 확대하여 여성 다수 직종의 저임금 문제 해결
- 채용과정, 교육 기회, 승진에서의 성차별 금지 방안 마련

#### ▲ 이행 방법

- ① 성별 임금공개법 제정
  - 독일의 임금공개법과 유사한 개별법을 제정하여 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성별이 다른 동일 가치노동을 하는 동료의 임금 및 임금체계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
- ② 여성 노동에 대한 통계조사 의무화
  - 여남별 고용 성비와 임금 격차, 여성 임원 비율 등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 ③ 성별 임금공시제
  - 2014년부터 매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형태 공시제에 성별 임금정보를 추가
- ④ 여성 임원 할당제
  - 고임금군인 임원에서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이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원인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공공기관 임원/기업 임원의 여성 비율을 50%로 의무화
- ⑤ 사용자의 처벌강화
  - 임금 공시제도와 정부의 노동 통계 조사를 통해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책임사업주(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이사)를 직접 처벌하거나 임금총액의 1%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 ⑥ 임금 격차 해소 계획서 제출 의무화
  -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임금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그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⑦ 면접 및 채용과정에서 여남 성비 공개
  -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접자와 채용합격자의 여남성비 공개
- ⑧ 채용 심사위원의 여남동수
  - 면접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위하여 여남동수의 심사위원 배정
- ⑨ 고용 평등 업무 전달 체계 강화

- 고용 평등위원회 고용 평등 전담과 부활
- 겸임 아닌 성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1인 47개 지방노동청(6개 지방노동청 및 41개 지역별 노동지청) 배치

▲ 이행 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채용 조달 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채용 소요 없음

[보건복지] 여성 신체의 건강과 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2019년 현재 85.7세로 추산되지만, 유병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4.4세로 그 격차가 매우 심한 편임. 본인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자에서 더 높았으며, 활동 제한을 역시 동일연령의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 여성에게 고유한 건강 문제들 외에도,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차이에 의한 발병원인 및 예후, 유병률, 치료방식 등이 다른 질병들이 많음. 특히 우울증, 골다공증의 높은 유병률, 폐경기 이후 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 질환, 만성 통증 질환 등의 증가는 여성의 자율적 활동을 제한하는 등 삶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됨.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개발, 승인된) 약물 부작용 등의 문제 역시 여성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공공의료 사업 등으로 의료격차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의료접근성의 격차 문제는 남아 있음. 직장인 건강검진 등의 혜택이 주로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등,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

▲ 목표

- 임신과 출산을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왔던 여성건강의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여성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을 보장하며 여성의 권리와 자율성,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 만들기

-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의학적 근거 마련
- 성별에 따른 의료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
-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를 반영한 치료제 및 의료기술 연구개발
- 모자보건법 폐지, 인권과 건강의 보편적인 권리에 기반한 “재생산권 보장법” 제정
- 임신 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 완전 폐지
- 여성의 생애 주기별 건강권 보장, 장애 여성 재생산권 보장

#### ▲ 이행 방법

##### ①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의학적 근거 마련

- 여성건강 관련 정책 수립 근거 확보를 위해 건강 문제의 생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 월경, 임신, 출산이 여성의 몸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
- 여성에게서 높은 유병률을 나타내는 우울증, 골다공증, 만성 통증 등 신체,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
- 돌봄 및 가사 노동자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감정노동자 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건강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지원으로 여성노동자 보호를 위한 의료적, 정책적 방안 마련
- 장애 여성의 재생산권, 건강권 확립 정책: 장애 여성의 자율적이고 안전한 재생산을 위한 전문적 상담창구와 건강 맞춤형 의료지원 시스템 마련

##### ② 성별에 따른 의료격차 및 건강 불평등 해소

- 학교와 직장에서의 월경 공결권 보장
- 건강보험공단 제공 건강검진 항목 확대
- 여성 질환 관련 건강보험 항목 확대
- 완경기 이후 질환 예방을 위한 중·노년 여성 특화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제공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골다공증, 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 여아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 강화
- 여성의 정신 건강 촉진을 위한 상담 서비스 지원
- 의약품에 여성 기준 투약량과 복용량 기입 의무화
- HPV 무료 예방접종을 감염경로가 되는 남성에게까지 확대

- 의학적 사유 외의 경제, 사회적 사유로도 임신 중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청소년 및 취약계층 여성 (장애 여성 등)이 임신 중단을 원할 경우 병원 정보 등 지원을 제공하며 임신 중단을 위한 의약품 판매허용

③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차이를 반영한 치료제 및 의료기술 연구개발

- 신규의약품 및 치료기술 심사승인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부작용 데이터 포함 의무화
- 보조 생식술이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관련 법제 및 가이드라인에 반영
- 월경 용품 및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약품의 안전성 및 성별에 따른 영향 조사 의무화

▲ 이행 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 조달 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건강보험 범위 확대는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할 사항. 공공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고,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 등은 질병 발생 이후 치료에 소요될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장기적으로는 재정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여성]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기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소시효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역고소가 남용되어 피해자를 위축시킴.
-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소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많은 피해자가 형사 및 사법절차 진행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있음.
- 2019년 7월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 고소 중에서 82.6%는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었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도 15.5%는 무죄가 선고되어 보복성 역고소가 남용되고 있음.
- 법적 보호를 받는 의제 강간 연령이 만 13세 미만으로 세계에서 유례없이 낮은 기준을 정하고 있어 실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 피해가 심각함.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 피해의 대상이 된 청소년을 피해 청소년과 대

상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대상 청소년은 사실상 소년법에 준하는 보호관찰처분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임.

- 성착취 문제가 온라인으로 진화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알선구조 역시 범망을 피해 변화하고 있음. 웹하드 카르텔, 버닝썬 카르텔,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부터 리얼돌, n번방 성착취에 이르기까지 온갖 형태로 확산되어 알선업자들은 수익을 창출하는데 여성의 몸을 이용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있음.

- 성매매·성산업 내 이주여성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음. 현재 태국, 캄보디아, 러시아 등지의 여성들이 한국 전역의 성산업으로 유입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 피해 여성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 통역, 수사 과정에 대한 지원, 출입국의 문제 등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함.

-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는 현존하는 제도 중 성매매 근절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음.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딕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매매 종사자가 50% 이상 감소했고 길거리 성매매도 절반가량 감소했으며 성 구매 남성 수 또한 감소함. 한국 정부에서도 강력한 노르딕 모델을 기반하여 상업화된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 목표

-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조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청소년 조항 삭제를 통한 아동청소년 실질적 보호
-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역고소 남용 제한 등 수사 및 처벌 실질화
- 상업화된 성착취 근절을 도모하는 노르딕 모델 도입
- 이주여성, 청소년, 장애 여성 등 여성폭력에 있어 보다 더 취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 이행 방법

##### ① 형법상 의제 강간 연령 상향 조정하는 법 개정 추진

- 현행 형법 305조의 의제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연령을 만 16세로 상향 조정

##### ② 성착취 피해청소년 보호 법안 마련 추진

-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대상 청소년 조항 삭제 및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 확대

##### ③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혹은 연장 법안 신설 및 역고소 남용 금지 대책 마련

- 성폭력 피해 당시 미성년자일 경우는 성년이 된 이후부터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죄'의 경우 업무·고용 관계의 중단 시부터 시효를 계산하거나 연장

- 고소에 대한 수사 시 성폭력 고소·고발에 따른 가해자의 보복적 의도가 의심될 경우 각하할 수 있는 지침 도입
-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 증거 채택 금지조항 마련
- ④ 상업화된 성착취 근절을 위한 수요차단 전략 도입
  -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처벌 규정 강화 및 알선 고리 차단
  - 성매매 관련 수사 전담체계 구성 및 제재 강화
- ⑤ 성착취 피해 외국인 여성 지원 대책 마련
  - E-6 비자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 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 강화. E-6 비자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강구
  - 인신매매 피해자의 체류자격 보장 및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
  - 임금체불 업주 및 알선 브로커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 강화 및 입증책임 전환

▲ 이행 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재원 조달 방안 등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특별히 재원을 소요치 않음

[경제] 여성에게 경제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에 대한 성차별, 임금 차별, 고용차별로 인해 여성 개인이 독립적 경제권을 행사하기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여성을 경제적 주체가 아닌, 가정 내 경제적 보조자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빈곤과 저임금에 내몰려 있는 실정.
- 1인 여성 가구, 장애 여성의 빈곤률이 가장 극심하나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 지원 장치가 전무한 상태.

▲ 목표

-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계층 상승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사회
- 남성 가장에 의존하지 않는 여성 개인의 독립을 보장하는 사회시스템 정비
- 여성 경제공동체의 창립지원과 연대 도모
- 1인 여성 가구, 장애 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금, 자기 개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임금상승 기회 부여, 경제적 독립권 실현

#### ▲ 이행 방법

- ① 1인 여성 가구 또는 여성 가장 가구(여성 가장이 미성년 자녀, 노인, 장애인, 환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복지제도 : 주택 보조금, 생활보조금, 독립보조금 등의 실질적 지원
- ② 비혼 여성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 지원 저금리 대출제도: 여성 경제 공동체 창립 가능성 도모
- ③ 여성 경제 공동체 창립 인센티브 제공 : 창업 지원금 및 창업 프로그램 제공
- ④ 여성 개개인에게 맞춤형 직업개발 교육지원금 및 프로그램 제공 : 여성들의 계층 상승과 임금 상승의 기회 제공
- ⑤ 다각적 여성 인재 풀(학력만이 아닌 기술, 경력, 경험도 우대) 시스템을 형성하여 여성 인력 채용 강화 루트 마련
- ⑥ 장애 여성 소득보장 정책 수립: 장애 여성에 대한 맞춤형 직업개발 프로그램 제공 및 장애 여성 경제독립 지원금을 제공하여 경제권 확립
- ⑦ 여성 소비자 가중세(핑크 택스) 신고제도를 통한 기업 패널티, 여성 경제권 평등 수립

#### ▲ 이행 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 재원조달방법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추가 재원 소요 없음
- 여성의 경제권 실현은 여성들의 수입을 상승시킴으로써 국가 조세 부문의 증가를 이루어낼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재원 충당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



[문화] 여성차별, 여성 혐오적 미디어 문화를 근절하고 산업 내 여성청소년 착취적 노동 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묘사는 현실의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빠르고 강하게 퍼트리는데 일조함.
- 예능에서는,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적은 빈도로 미디어에 노출되며, 그마저 남성의 보조적 역할, 어리고 외모가 부각되는 역할로서 캐스팅되어 여성은 남성의 보조적 역할만을 수행함.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미디어 성차별 모니터링에 따르면 여성 출연자는 남성 출연자 대비 30% 수준, 2017년 저널, 드라마 남성 제작 PD는 여성 제작 PD 대비 5배에 달함.
- 성차별적 고용은 미디어 내 여성 혐오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규제해야 할 관계부처 등도 성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방송 관련 규제기구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모두 남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9명 중 6명이 남성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명 중 6명을 넘을 수 없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사의 역할은 미디어 정책이나 프로그램 안에서 성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는 주체들이기에 그 구성에 있어서도 젠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
- K팝의 글로벌화 등과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잘못된 외모 스테레오 타입을 강조하여, 이로 인해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들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기존의 미디어 매체를 벗어난 새로운 형식의 영상 매체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고 비하하는 콘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양산되어, 이를 쉽게 접하는 아동 청소년기 여성과 남성의 가치관 형성에 큰 악영향을 끼침.
- 2018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성차별적 개인방송 169편 중 절반에 가까운 46.7%(79건)이 적대적 방송이었고, 관련 키워드도 '김치녀', '여성 혐오', '페미니즘', '워마드' 등이었음. 이러한 무차별적 여성 혐오 표현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목표

- 정부 부처, 관련 공기업 및 제작진, 출연자에 대한 동수 고용을 통한 성평등한 미디어/콘텐츠 제작 환경 마련
- 매체 내 여성 혐오적, 성별 불평등한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여성, 아동 청소년 착취, 학대에 대한 근절 방안 마련
- 성폭력, 성매매 사범에 대한 출연 금지 법제화 및 기존 정책 내에서 논의되지 못한 신규 매체에 양산된 여성 혐오 근절 대책 마련

## ▲ 이행 방법

- ① 성차별적 환경 개선 및 미디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부처 관계자, 출연자 및 제작진 동수 고용을 추진 - 미디어 관계부처, 미디어 제작자(방송국, 제작사 등)에 여성 고용 및 여성 의사 결정자(PD, 임원), 출연진에 대한 고용 및 제작 쿼터제 도입 등 성별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할당제 요구
  - 성별 분업에 따른 여성 직군(여성 아나운서, 작가 등)의 비정규직 채용 관행 개선
  - 여성 혐오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방송 뉴스 및 신문 뉴스 등 매체 내 성별 불평등적 표기에 대한 금지 강화
  - 특정 성별에 대해서만 성별 표기로 하거나, 남성이 가해자일 경우 사건을 약화시키고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나 피해자 2차 가해를 야기하는 보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위한 법안 마련
  - 여성 대상 폭력 범죄에 대한 낭만화, 연성화 등 성별 불평등 요인들을 모니터링 하고 각 언론사의 실태 조사하여 권고 조치 후 권고 3회 이상 누적 시 벌금형 및 시청자, 구독자 사과 게시 등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
- ②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여성 아동 청소년 착취, 학대에 대한 근원적 근절 방안 마련
  - 만 16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 대한 미디어 산업 전반의 노동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업자에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 조치
  - 만 16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자에 대해 필수적으로 연습생 및 소속 연예인에 대해 정신 상담 정례화 및 건강 검진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사업자 취소 등 처벌 조항 마련
  - 표준 체중 이하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를 조례화하여 아동 청소년 건강을 해치는 미디어 환경을 개선
- ③ 성폭력/성매매 관련 사범에 대한 출연 금지 강화 및 수익 환수
  - 성범죄자에 대한 방송 복귀 금지 및 방송 및 영화 등 출연 금지를 강화하고, 방송 복귀 시 이에 대한 사업자 벌금 조항 신설
  - 성범죄자의 음원 유통에 대한 음원 유통사(멜론, 카카오 뮤직 등)에 대한 징벌적 벌금 조항을 마련
  - 성범죄자의 유튜브 및 아프리카 방송 채널에 대해 수익 불가 협조 요청(광고 불가능)을 제도화
- ④ 기존 법 내에서 논의되지 못한 신규 매체들에서 양산되는 여성 혐오에 대한 대책 마련
  - 주요 미디어 매체(유튜브, 트위치 등)에 대해 여성 혐오적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전면적 광고 제한, 영구 계정 삭제 등 제도화
  - 게임 내 커뮤니티 등 기존 미디어로 분류되지 않았으나, SNS 성격을 띠는 신규 아동 청소년 대상 온라인 매체에 성폭력적 상황이 있을 경우 이를 전담하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법령을 마련
- ⑤ 기타

-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저작물(방송, 유튜브 콘텐츠, 광고, 사진 저작물 등)에 대한 제작자 강력 처벌 및 유통채널에 대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고, 교복 및 아동복 등 아동을 연상하는 대상물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엄격히 규제

#### ▲ 이행 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 재원 조달 방안 등

- 미디어 노동권 경우 추가 고용보다 고용의 성평등을 추진함으로 추가적 재원 마련 없음
- 특히, 신규 미디어에 대한 여성혐오 근절 방안은 징벌적 벌금 부과를 추진하기에 이에 따른 부가적 세수 확충이 발생하며, 증가된 세수익을 통해 성평등 미디어 교육 등 정책을 추가적으로 집행함

### [정치]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 헌법으로 바꾸겠습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은 독립운동, 정부 수립, 경제발전, 민주화 운동 등 대한민국 역사의 모든 현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고 현재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해왔음에도 투쟁의 모든 성과는 남성들이 독점하고, 여성들의 역할과 헌신, 기여는 남성들에 의해 지워지고, 여전히 이등 시민으로 머물 것을 요구받고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조항만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주체성, 특히 정치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대표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우며, 남성 중심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데 역부족임.
- 20대 국회는 80% 이상의 남성, 50대 이상의 고연령층,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 고소득자이며, 대다수 경력이 정치인 또는 법조인으로 한국 사회의 기득권 남성집단이 국회를 과대대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에서 배제되고 있음.

#### ▲ 목표

- 성평등 개헌

- 국가의 모든 법률과 정책이 여성주의/페미니즘 관점에 기초해 재구성되기 위해서는 상위법인 헌법을 성평등한 방향과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중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확보’와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를 헌법에 명시
-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함께 여성과 남성 각각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와 이주 등 소수집단 또한 의사결정과 정책 입안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헌법에 명시

#### ▲ 이행 방법

##### ① 10차 헌법 개정 추진

- 여성 시민이 이끄는 헌법개정 운동을 주도
- 성평등 헌법 개정을 위해 여성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통로와 공간을 마련
- 개헌 논의 시 만들어질 모든 공적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40% 이상을 확보

##### ② 10차 헌법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대표성 보장’과 ‘국가의 성평등 실현 의무’ 명시

- 국가는 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성평등은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보장
- 법률은 선출직·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직업적·사회적 지위와 책임을 동등하게 보장

#### ▲ 이행 기간

- 21대 국회 임기인 2024년까지

#### ▲ 재원 조달 방안 등

- 국민 투표 예산